

광주시, 5·18 사적지 활용 방안이 없다

사적지 보존·정비·원형 복구 계획 발표

광주시가 처음으로 5·18민주화운동 사적지를 보존 및 정비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마련했다. 하지만 대부분 사적지에 대해 활용 방안을 결정하지 못하고 원형 보존하는 데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광주시는 최근 '5·18사적지 보존·정비·원형 복구 계획'을 수립했다고 17일 밝혔다.

계획안에 따르면 광주시는 총 2000억원을 투입해 적십자병원, 흥남순변호사 가옥, 5·18 구 묘역, 505보안대, 국군병원, 광주교도소 6곳을 우선 정비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정비 작업을 추진 중인 옛 전남도청과 상무관을 제외하고 나머지 24개 사적지는 표지석 정비, 환경 정비만 할 방침이다.

광주시 동구 공동에 있는 고(故) 흥남순변호사 가옥은 올해 안에 개축 완료해 공개할 예정이다. 총 예산 10억원을 투입해 원형 복원하고 기념관을 조성할 계획으로, 광주시는 이달 초 부지 매입 절차를 마쳐 착공을 앞두고 있다.

다만 나머지 사적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국비가 확보되지 않은데다 활용방안 논의의 해야 할 5·18공법단체의 지도부가 정립되지 않아 논의의 진전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5·18구묘역 성역화 사업은 10차례 넘는 TF회의에도 사업 계획을 확정짓지 못하고 있다. 당초 광주시는 구묘역을 국립 5·18민주묘지(신묘역)와 유사하게 성역화해 콘텐트를 추가, 시민전화공원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이었으나 광주 지역 시민단체는 "80년 이후 안정한 민족민주열사들의 역사성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반발하고 있다.

적십자병원·505보안대 등 32곳 표지석·환경 정비·원형 보존 거쳐 수 천억 예산 확보 '산 너머 산' 5월 단체와의 논의도 담보 상태

광주시 관계자는 "올해는 추정 예산도 안 잡힌 상황이다. 기본 설계는 커녕 기본 계획안도 나오지 않는 상태"라며 "일단 이달 말 5월 단체 임원진이 꾸려지고 나면 다시 논의를 시작해 기본안을 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올해까지 준공 예정이었던 동구 불로동 옛 광주 적십자 병원 개축은 착공 시점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올해 안에 활용 방안을 확정짓는 것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광주시는 예산 175억원을 투입해 이곳에 라키비움, 현열의 집, 문화예술창작소 등을 설치하는 안을 내부적으로 정했으나, 활용방안을 결정짓기 위한 TF 회의에서 현재까지 결론을 내지 못했다. 지난 1월 열릴 예정이었던 TF 회의도 5·18 공법단체 지도부 공석으로 무산됐다.

예산 57억원을 투입할 예정인 서구 화정동 505보안대 역사공원 조성 사업은 지난해 1월 이후 일시 중지됐다.



광주시 동구 불로동 광주적십자병원 전경. /나명주 기자 mjna@kwangju.co.kr

설계 자체는 지난 2020년 완료했으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Barrier Free) 인증을 받기 위해 엘리베이터와 장애인용 경사로 등을 설치하면서 사적지를 훼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다.

광주시는 지난해 1월 5·18기념사업위원회를 통해 '사적지 일부를 변경'하는 안을 승인받았으나, 설계를 마치더라도 다른 사적지 정비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공사가 수년 늦어질 것으로 예상돼 보완 설계 시점을 기약할 수 없게 됐다.

서구 화정동근린공원 일대에 있는 옛 국군공주통합 병원은 폐건물 상태 그대로 방치될 전망이다.

이곳 인근에서는 오는 5월 '화정근린공원'이 문을 열 예정이나, 광주시는 병원 폐건물에 대한 활용 방안을 정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는 공원이 준공되도 병원 폐건물에 대해서는 환경 정비만 하고 별다른 원형복원·개축 등 공사를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북구 문흥동 옛 광주교도소에 예산 1400억원을 들여 조성할 예정이었던 '민주·인권기념파크' 또한 기약없이 미뤄졌다.

이곳에서는 기획재정부가 부지 일부에 고층 아파트를 짓고 분양 수익금으로 '민주·인권기념파크'를 짓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사적지 훼손 논란이 일었다.

광주시는 5·18진상조사위 조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광주교도소의 역사적 가치를 강조, 기재부 선도 사업을 행안부 국비 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5·18민주화운동은 근본적으로 국가가 광주 시민에게 피해를 입힌 국가폭력이므로, 국가가 책임을 지고 사적지 관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며 "국가가 적극적으로 국비를 투입해 사적지 정비에 나서 체계적으로 사적지가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강도 청렴정책 추진 시교육청, 1등급 추진본부 운영

광주시교육청이 간부공무원의 청렴도를 성과 지표에 반영하는 등 고강도 청렴정책을 추진한다.

광주시교육청은 17일 청렴도 1등급 추진본부를 꾸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청렴도 향상 종합정책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외부청렴도 평가에서 문제로 지적된 소극행정과 절차위반, 업무 불투명의 업무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청렴도 1등급 추진본부를 운영하기로 했다.

대민부서는 친절 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전화 민원 바로 응답 시스템 마련 등 친절행정에 주안을 두는 한편, 주요 사업의 누리집 공개도 의무화할 방침이다.

5급 이상은 자체 공직자 청렴도 평가 등을 성과 지표에 반영해 고위직의 청렴 책무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부패 취약분야 개선을 위해 학교 운동부와 방과후 학교, 공사 관리·감독 등 3개 분야는 학부모와 방과후학교 강사, 공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청렴 클린콜 조사를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오는 26일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과 협업체 청렴라이브(Live) 교육도 열 예정이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은 "청렴과 고객만족은 공직자의 기본 소양으로 저와 부교육감, 국장 등 고위 간부들부터 무한 책임을 지고자 한다"며 "올해는 반드시 청렴도를 향상해 광주교육의 신뢰를 회복하고 한층 더 개선된 수준의 교육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의 종합청렴도 조사에서 4등급을 기록하는 등 하위권에 머물렀다.

'진도 저수지 살인' 진실 떠오를까

피고인 사망 궤석 재심 6월 현장검증

19년만에 재심이 시작된 '진도 저수지 살해사건'의 현장검증이 다시 열린다.

17일 오전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형사1부(박현수 재판장) 심리로 무기수 A(66·작고)씨에 대한 재심 첫 재판이 열렸다.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복역 중이던 A씨가 이달 초 급성 혈액암 판정으로 숨졌지만, 궤석재판으로 진행됐다.

A씨는 지난 2003년 9월 9일 화물차 조수석에 아내 B(당시 45세)씨를 태운 채 해남에서 진도방향으로 가던 중 명금저수지(현 송정저수지)에 빠졌다. 그는 사고 현장에서 빠져 나왔으나 아내는 숨졌고 자신은 살인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A씨의 변호인인 박준영 변호사는 재판부에 현장검증을 요청했다.

과거 검찰과 1심 재판부의 현장검증에서는 A씨가 일부터 저수지를 향해 운전했다고 봤지만, 실제

도로에서 직진을 하다보면 차량이 저절로 저수지를 향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증명하겠다는 취지다. A씨의 죽음은 전적으로 인한 사고였다는 것을 규명하겠다는 복안이다.

그는 "저수지 주변 도로의 지형과 형상 등은 큰 변화가 없어 사고 당시와 동일하다"며 "현장 검증 차량도 최대한 유사한 제원의 차종으로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박 변호사의 제안을 받아들여 오는 6월 3일 오후 4시부터 사건이 발생했던 저수지 일대에서 현장검증을 진행하기로 했다.

또 박 변호사는 이후 사고 발생 부위 수사 단계부터 관련된 이들을 증인으로 부르겠다는 계획을 제출했다.

차량을 인양했던 관련자, 구조한 소방대원, 수사 경찰 뿐 아니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인, A씨 보험설계사까지 증인으로 부르겠다는 것이다.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여 인양 참여인에 대한 증인신문이 5월 22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시험문제 해킹 고교생 '1심 실형 불복' 항소

교사 노트북을 해킹해 시험지와 답안지를 훔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10대가 항소를 제기해 첫 재판이 열렸다.

17일 광주지법 202호에서 형사2부(부장판사 김영아) 심리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19)군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열렸다.

A군은 공범인 친구 B(19)군과 함께 지난 2022년 3~7월 자신이 재학중이던 광주의 한 사립학교

교무실에 침입해 교사 컴퓨터에 악성코드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중간·기말고사 16과목 시험문제와 해답을 빼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군은 1심에서 소년법에 따라 단기 1년~장기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B군은 1심 재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지는 않았다.

머리 들이밀었는데 상대가 피하다 숨졌다면?

광주지법, 폭행치사 무죄

말다툼 중 머리를 들이치는 바람에 상대방이 피하다 숨졌더라도 폭행치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재성)는 17일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76)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광주시 동구의 한 요양병원에서 80대 동료 환자를 위협해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화장실 사용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때릴테면 때리라"며 머리를 들이밀었고, 피해자는 이를 피하려다 다툼을 말리던 요양보호사와

함께 넘어져 머리를 다쳐 숨졌다.

검찰은 A씨가 육체·정신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했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A씨의 위협을 폭행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는 피해자 쪽으로 향했던 것에 불과하고 피해자가 A씨의 머리에 맞아 다친 것도 아니며, A씨가 단지 때려보라는 취지로 맞받 아친 것에 불과하다"면서 "A씨의 행위가 물리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뒤로 넘어져 머리를 부딪히고 사망한다는 것까지 예견했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폭행치사죄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광주문화산업이 평생 어부바 해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다채로운 금융

출자금 비과세 한도 상향
개인당 **2,000만원**까지
완전 비과세

자산규모
1조 5천억원

창립 이후
30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9% 이상
지역사회 환원

- 본점
- 양산지점

- 여신사업부
- 동광주지점

- 문흥지점
- 동림지점

- 운암지점
- 매곡지점

- 첨단지점
- 각화지점

광주문화산업 대표전화 1644-7990